

[p.154]

〈대표유형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·정비·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.
-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·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[p.149]

1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(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⑤ 사업시행자(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)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(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석면 조사·해체·제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[p.153]

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()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(㉠)에만 건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(㉡) 이하이어야 한다.

- ① 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㉡ 100분의 20
- ② 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㉡ 100분의 30
- ③ ㉠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㉡ 100분의 10
- ④ ㉠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㉡ 100분의 30
- ⑤ ㉠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 ㉡ 100분의 30

[p.149]

15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.
-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-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p.152]

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
-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·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
- ③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- ④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(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⑤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

[p.151]

0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·군수 등은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 등,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,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·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·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[p.156]

08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'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'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
-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
-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
-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
- ⑤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

[p.156]

<대표유형>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이하 '추진위원회'라 함)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·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.
- ③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·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한다.
- ⑤ 추진위원회는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[p.158]

1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()에 들어갈 내용은?

-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(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(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별 구분소유자의 (㉠) 동의(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(㉡)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(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(㉢) 이상 및 토지면적의 (㉣)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① ㉠ 2분의 1 | ㉡ 4분의 3 | ㉢ 4분의 3 | ㉣ 2분의 1 |
| ② ㉠ 과반수 | ㉡ 4분의 3 | ㉢ 4분의 3 | ㉣ 3분의 2 |
| ③ ㉠ 3분의 2 | ㉡ 2분의 1 | ㉢ 4분의 3 | ㉣ 3분의 2 |
| ④ ㉠ 과반수 | ㉡ 4분의 3 | ㉢ 4분의 3 | ㉣ 2분의 1 |
| ⑤ ㉠ 4분의 3 | ㉡ 3분의 2 | ㉢ 3분의 2 | ㉣ 2분의 1 |

[p.159]

1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
-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.
-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.
- ④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.
- 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[p.159]

1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?

지 번	토지소유자	건축물소유자	지상권자
1	A	B	
2	C		D, E
3	F	B	
4	A	A	

-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

[p.162]

1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, 감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,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.
- ③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-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.
- ⑤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
[p.163]

2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
-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- 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
- ⑤ 시공자·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

[p.157]

0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주택법」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(매매·증여,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·이혼으로 인한 양도·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)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-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(조합임원의 권리·의무·보수·선임방법·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)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.
- ③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.

[p.164]

25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·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·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.
-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.
-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.
-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.

[p.165]

2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-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- ③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
- ④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-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

[p.166]

2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 등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사업시행자(시장·군수 등 또는 토지구획사업자 등은 제외한다)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시장·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(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)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시장·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p.170]

3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?

-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·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·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분양설계는 사업시행 인가·고시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·변경·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.
- 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없다.

[p.170]

<대표유형>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,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.

- ③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.
- ④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,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85㎡ 이하로 한다. 다만, 85㎡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.
- 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

[p.171]

3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.
-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-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·군수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 등은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

[p.167]

3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하여 지상권·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·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.
- ③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.
-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.
- 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·전세권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「민법」 제280조 이하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4조 등을 적용한다.

[p.169]

3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.
-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·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.
-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·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⑤ 시장·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p.174]

4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·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.
-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[p.175]

<대표유형>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.
- ② 정비구역의 국유·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.
- ③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.
- ④ 시장·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용자할 수는 없다.

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
p.154	<대표> ⑤	p.149	16. ③	p.153	04. ②	p.149	15. ③
p.152	02. ②	p.151	01. ④	p.156	08. ③	p.156	<대표> ④
p.158	10. ④	p.159	13. ②	p.159	14. ②	p.162	19. ②
p.163	22. ①	p.157	09. ②	p.164	25. ⑤	p.165	26. ③
p.166	29. ①	p.170	36. ④	p.170	<대표> ④	p.171	39. ①
p.167	31. ①	p.169	33. ③	p.174	42. ④	p.175	<대표> ②

“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수업용 프린트이므로 별도의 해설은 제공되지 않고 정답만 제공되며,
수업시간에 전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진행됩니다.”

- 오시훈교수-